

The Reunified Korea Economy

統一經濟

1997. 6 통권 제30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6 1997 第30호

편집자의 글
대북 식량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며 2

초 점
남북적십자회담의 효과와 한계 • 박송동 4

특 집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
경제 제재 완화 조치 추이 및 전망 • 남궁 영 10
북한 경제와 경제 제재 완화 • 조동호 22
남북 경험과 경제 제재 완화 • 양법직 31
북일 경제 관계와 경제 제재 완화 • 나까가와 마사히코 39

기획연구
북한 '수령제'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에 관한 연구 • 류길재 48

논 단
북한의 농업 개혁 · 개방과 남북한 협력 방안 • 황동연 70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 평가와 남북 관계 • 임윤철 88

통일다리
북한의 토종 • 신원태 96

북한경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I)- '항만' • 홍순직 103

통일연구
구 동서독 화폐 통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윤머름 122

해외기고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 양자간 접근법 對 다자간 접근법 • 김용호 140

통 일 제 30 호
창간호는 제 1호
창간일자 196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1월 22일
연말 및 발행인 간담회
간담취회 김순원(위원장)
이두환 장경준
홍순직 조동호
이법우 신원태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간담회
장 동 제 141호(제사)발행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178
세종문화회관 13F-1309
F. A. X (02)739-1773
인쇄 서울출판문화연구소
대표전화 (02)636-0656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제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대북 식량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며

초 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제 지원을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식량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두 입장 모두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者회담의 성사를 전제로 한 대북한 식량 지원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북 식량 지원이 가능한 길을 터 놓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이 2차회담을 거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 박송동 연구위원은 ‘초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의 의미를 대화 창구 확보, 화해 무드 조성의 첫걸음 등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대북 관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특집’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경제 제재 완화 조치 추이 및 전망”에서 민족통일연구원 남궁 영 연구위원은 향후 해제 가능성이 높은 조치로서 ①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해제, ② 대북 수출입 품목 확대, ③ 선박 및 전세기의 북한 입국 허용, ④ 미국 은행을 통한 송금 허용 등을 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와 경제 제재 완화”에서 제재 완화가 직접적으로 단기간 내에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가 10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이며, 이는 북한 GNP를 약 8~11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한화경제연구원의 양범직 책임연구원은 “남북 경협과 경제 제재 완화”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한미 공조와 미국의 ‘조화와 병행’ 원칙에 따라 남북 경협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 한계에 이른 교역을 대체하여 직접 투자의 활성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려대 평화연구소 나까가와 마사히코 객원연구원은 “북일 경제 관계와 경제 제재 완화”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북일 경제 관계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나, 간접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연구’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류길재 교수의 “북한 ‘수령제’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에 관한 연구”를 실었다. 이 글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령제’ 권위주의체제는 70년대초 등장하였으며, 여기에는 60년대 경제적 위기와 국제 환경의 위기로 인해 심화된 안보 위기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정치 노선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의 '논단'은 모두 대북 지원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다. 먼저 본 연구원의 황동연 주임연구원은 "북한의 농업 개혁·개방과 남북한 협력 방안"에서 남한의 대북 지원 방향은 북한 지역에 알맞는 농법의 개발 및 이를 위한 각종 농업 기술, 자금 지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 지역 내에서의 남북한 공동 개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 평가와 남북 관계"에서 한겨레신문의 임을출 기자는 최근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이 식량 뿐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북 지원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에 의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의 신원태 기자는 "북한의 토종"에서 북한의 토종 동식물, 특산품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우리 조상의 유산을 남북한 함께 지켜나가야 함을 되새겨 주고 있다.

한편, 이번 호부터는 '북한경제'란에 새로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을 시리즈로 신기로 하였으며, 그 첫째로 본 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의 '항만'편을 실었다. 이 글은 당분간 해운항만이 수송 분야의 핵심이 될 것이며, 남포항과 나진·선봉항을 중요 항만으로 꼽아, 이 지역의 투자 및 연계수송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이달의 '통일연구'에서 연세대 통일연구원 윤덕룡 연구교수는 "구 동서독 화폐 통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 독일 화폐 통합의 특징으로 ① 급진적 화폐 통합 ② 환율의 고평가 ③ 제도적 화폐 통합을 들면서, 우리로서는 화폐 통합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며, 시기 선택이 불가능한 갑작스런 화폐 통합의 경우 화폐 유량에 대한 전환율이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해외기고'에서는 현재 옥스퍼드大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외교안보연구원 김용호 교수의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양자간 접근법 對 다자간 접근법"을 실었다. 이 글은 핵, 식량 문제 등을 예로 들어, 현단계의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양자간 접근법보다 다자간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며,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협상할 의지를 가질 때까지 남한 정부는 다자간 접근법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 남북한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상황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1997년 6월
편집자